



환경부의 '96년도 환경예산 운영방향

우 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90년도 이후 낙동강 오염사고와 최근에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로 인한 연안어장의 피해, 씨프린스호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경제적 이기주의와 결부되어 무역과 환경이 연계된 새로운 국제분쟁의 장이 열리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투자를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에 따라 기 발생한 오염의 제거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96년도 환경부 예산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6,101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2,249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425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2억원 등 8,967억원으로 '95년의 6,729억원보다는 33.3%가 증액되어 정부의 세입세출 순계예산 대비 1.05% 수준이며, 건설 교통부 등 다른 부처 환경관련 예산을 합계한 환경부문예산¹⁾은 2조1,979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박 일 호

환경부 기획예산 담당관실 행정사무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지속적 확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원인자 부담제도의 확대·시행으로 재원이 확충되고 있다. 세입은 1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종의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중에는 수질

개선부담금, 유독물과징금 등의 세입이 추가된바 있다.

'96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수입 3,583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18억원을 합계하여 6,101억원으로 편성되어 '95년 대비 45.5%가 증가되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수입 3,583억원은 '95년의 2,533억원 보다 41.5%가 증액

1) 환경관련업무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환경관련 예산도 산재되어 있는데, 주요내역은 환경부 예산 8,967억원,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 예산 3,753억원, 내무부 수질보전지방양여금·수질보전교부금·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예산 5,178억원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 3,281억원을 합계한 21,979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것은 전년도에 17,394억원보다 26.4%가 증가되었으며, 정부의 세입세출순계예산의 2.58% 수준이다.



된 금액으로, 증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따라 616억원('95년 976억원 → '96년 1,592억원)이 증액되었고, '95.5월부터 먹는물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수질개선부과금이 신설되어 26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상수도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에서 계획된 고도정수처리시설 18개소중 '95년 완공분인 5개소의 13개소에 대한 계속투자를 위하여 546억원과 노후관과, 녹슬기 쉬운 아연도 강관을 교체하는등 수도관 개량사업에 1,3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급수량이 증가('83 : 273 → '93 : 394l)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하여 3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농어촌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어 생활용수가 부족한 중소도시에 국고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농어촌 상수도의 개발을 위해 20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사업에 3,753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00억원(내무부 농어촌상수도 200억원, 농수산부 암반지하수개발 80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등 상수도 부문에 '96년에 7,138억원을 반영하여 '95년의 6,219억원보다 15%가 증가하였다.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수질을 I ~ II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94년에 42%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97년도에 55%, 2005년도에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그 투자비는 여러 재원에 분산되어 있다.²⁾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에 따라 대구, 대전 및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용자지원토록 한 바 있으나,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부산, 인천광역시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340억원을 용자지원토록 하였다. 특히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주요 수상경기장으로 활용할 수영만(요트경기장), 낙동강(카누, 조정경기장) 하구의 수질개선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을 지원토록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으나, 하수처리장 건설에 상응하여 하수관망이 연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하수관의 개보수를 위한 정비사업에 700억원을 신규지원하여 노후된 하수관거 549km를 정비키로 했다.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311억원)하는 외에,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5년 이상된 노후분뇨처리시설의 개보수비 130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한편, 행위제한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만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연간 수도판매수입금의 3%이내에 총사업비의 70%(136억원)를 출연하고, 국고로 나머지 30%(58억원)를 분담 지원하여 총 19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의 팔당, 대청등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일부와 효율이 높은 정화조의 설치를 지원하는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남해안 지역에 발생한 적조 및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자금 10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반폐쇄성 해역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의 해저퇴적물 준설과 연안 오염도등 해양환경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해양조사선 건조를 위해 29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외에도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

2) 시·군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기본설계는 전액 국고,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및 시설설치는 지방양여금·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비, 광역시 하수처리장 설치의 환특용자·지방비 등의 복잡한 지원체제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중 국고, 지방양여금, 공공자금관리기금등 중앙정부의 하수처리시설 투자비는 총 6,620억원의 규모에 이른다.



북평·대불·정읍등 국가 및 지방공단 하·폐수처리시설 설치, 구미·반월·울산·창원등 공업지역 하수도 설치관련 차관원리금 상환 등에 4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상의 전국 주요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의 '96년 예산은 2,550억원으로 '95년의 1,720억원보다 48.3% 증가하였다. 그러나, '94년에 수립된 4대강 수질개선대책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3,218억원과 수질개선 지방양여금 3,978억원을 포함하는 경우 총 9,809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폐기물을 재생·재이용하는 순환형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무해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96년에는 폐기물 분야에 1,88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에 1,453억원보다 29.4%가 증가하였다.

유해성이 심한 특정폐기물의 공공처리율을 '95년의 8.8%(134천톤/년)에서 '97년의 30%(583천톤/년)로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3개권역(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6개소의 신·증설을 추진하는데 201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일반폐기물은 배출원자의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위생처리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큰 통합시 등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확충에 250억원, 광역처리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재활용시설,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2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매립지 확보난 해소는 물론 폐열회수·재활용 측면에서도 매립시설의 설치와 병행하여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94년의 생활쓰레기 위생소각율 3.5%를 2001년까지 3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소각시설 설치비 191억원과 지형특성상 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도시지역에 24억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95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페타이어, 페플라ستيك등 재활용 가능한 폐자

원의 처리시설등 기반시설 설치에 484억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집·처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40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매립이 완료된 비위생매립장의 정비사업, 생활폐기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공공퇴비화 시설의 설치와 합리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성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폐기물 센서스 비용 등을 신규 반영하였다.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개발 지원

사전적 환경오염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환경기술수준은 수질·대기오염방지설비의 80% 정도가 국내 설계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나 탈황·탈질설비, 소각로등 고급기술은 대부분 선진국 설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기술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의 GDP 대비 환경연구개발 투자비율 0.02%('89)의 1/4수준인 0.005%('92)에 불과하므로 투자율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한다.

G-7환경공학기술개발계획에 의하여 저공해 소각기술, 고효율 집진기술등 21개 과제 등 첨단환경기술의 집중 개발로 국내환경 기준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제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환경산업을 2000년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5억원을 투자하고 환경기반기술과 원천기술의 개발과 대형 경유차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1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초시설 개선자금 및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64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운영비 부족액 등을 위하여 89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환경연구정보의 종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수행할 수 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비와 건축 공사비 176억원을 반영 하였다.

자연환경, 대기보전분야의 투자확대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하여는 보전과 이용의 두 기능이 조화되어야 하나 그동안 개발정책이 우선되고 환경보전이 도외시되어 자연훼손과 다수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는 청정연료, 저황류 등의 사용의 무화와 대상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로 아황산가스, 먼지 오염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이산화질소, 오존 오염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자연환경 및 대기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전국토를 환경측면에서 진단하여 국토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도로·댐 등의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이동통로 설치사업에 7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국적으로 조업이 끝난 폐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그외에 생물다양성 협약의 가입('94.10) 및 발효('95.1)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과 지하수와 토양오염방지 및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96년도에 105억원을 지원하여 '95년의 29억원보다 292%가 증가하였다. 도시매연의 주요원인인 대형경유차량(시내버스)의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에 50억원 융자지원기로 하였으며, 국가간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조사와 지하철역, 지하상가등에 적용할 지하 공기질의 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4억원의 용역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국 210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량 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환경보전

국민의 증대되는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최근의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도 이후 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액 부족으로 하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기초의 시설 확충은 속성상·일정기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원이자부담제도의 확대시행과 탄소제 등의 환경세 도입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수혜자 부담원칙의 적용과 민간자본의 도입방안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보조금 확대에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의 확충 노력이 긴요하므로 쓰레기 수수료, 상수도료등 각종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생산·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과 미래의 경제활동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생할 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한 환경피해의 최소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오염의 방지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이윤 극대화 목표와 일치된다는 관점에서 생산공정의 개선등 민간부문의 환경투자 확대와 국민 각자는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환경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임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오염행위를 자제하고 환경오염의 감시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